



## 2013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2. 10. 16.(수)~	담당자	박 소 희 비서
------	-------------------	-----	----------

### ▶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점검

#### - 류성걸 의원, ‘제도개선 1호’ ⇨ 관세율표 개정[안] 입법예고

- ☞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정요구에 정부 제도개선으로 화답’
- ☞ ‘자체 경제성장 전망 모형개발’ 과 ‘세입 실명제 도입’ 요구에 묵묵부답, 갈 길 먼 정부

### ▶ 공공기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 공기업 분류기준, ‘원가보상률’로 일원화해야 한다

- ☞ 개편된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분류 기준이 달라 국가채무 혼선초래

#### - 노사 단체협약서 문제 많다.

- ☞ ‘공공기관의 제 규정보다 국가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서’
- ☞ 가족 ‘우대 특례채용’조항은 단체협약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사관리규정’에도 있어

### ▶ 되살린 「녹신회의」, 1기 경제팀 다시 뛰는 계기가 되어야...

####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팀의 역할 중요 국민 평가는 겹쳐히 수용하자

### ▶ 경제민주화 성장과 조화, 두 마리 토끼 모두가 필요하다

- ☞ 경제민주화 후퇴는 없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상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감사가 한 번의 지적과 한 번의 넘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정책을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감사의 과제일 것임.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함.

#### ○ (관세율표 관련)

질의 1) 지난해 본 의원은 현행 ‘관세율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에 필요한 내용을 한 권의 자료집으로 꾸며 이곳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부총리께 여쭙겠음.

#### □ 경 과

- 2013년 5월 13일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
- 2013년 6월 15일 : Y 관세사 개정의견 제출(2012년 국감지적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함)
- 2013년 6월 20일 : 관세율표 국문표현 등 정비작업 연구 세미나(제1차) 개최
  - 발표자 : 관세사,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토론자 : 김재식 교수/관세사(서원대), 이효원 교수(충북대, 대한화학회), 오수교 소장(중앙관세분석소), 홍영선 박사/관세사(남서울관세사문소)
  - 세미나 목적 : 관세율표 국문표현 등 개정 방향 및 세부 개정 내용에 대한 토의 및 검증
- 2013년 6월 20일 ~ 2013년 7월 4일 : 개정의견에 대한 검증 및 검토(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3년 7월 5일 : 중간보고서 제출
- 2013년 8월 2일 : 관세율표 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8월 12일 ~ : 관세율표 개정(안)에 따른 HSK 개정(안) 검토
- 2013년 8월 12일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용역 종결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총 43건 반영)

평가) - 연구 용역을 통한 법률 개정까지 이룸.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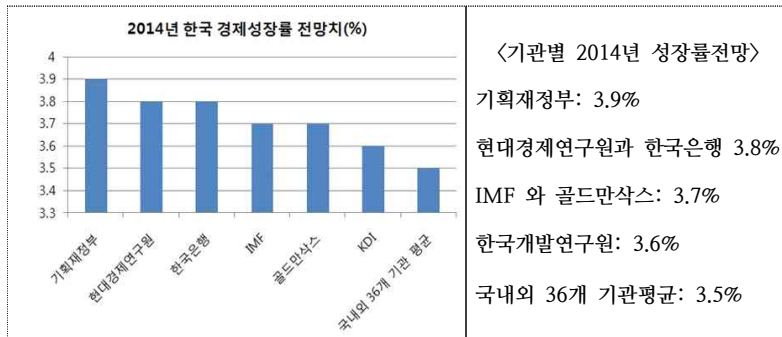
- 본 사항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써 건의하고 반영된 ‘제도개선 1호’ 정책임

○ (경제성장 모형) 두 번째 사항은 ‘경제성장률 모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음.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경제성장 예측모형을 만들고 그것에 기초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을 하고 잃어버린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 또한 “성장률 전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질의 2) 그 사이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

정부는 2013년에 4% 성장을 말했지만, 2.8%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세수 또한 추경을 거쳤음에도 8조원 수준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더욱이 2014년도 성장률을 3.9% 전망하고 있어, 전문기관들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했는데, 근거가 되는 모형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3) 지난해 본 의원의 지적 후 성장률 예측모형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단순 시계열 모형 혹은 부분 모형에 기초한 거시전망의 예측력이 한계가 있음.  
 \*\*한국은행의 경우, 기본모형 BOK04, BOKDPM, BOKGM + 위성 모델들(초단기예측 모델, 경기판단 모델, 잠재GDP 모델)로 성장률 예측

질의 4) 경기에측과 함께 중요한 것이 세수추계 부분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먼저 세수실명제를 도입하고 세목별, 전체 세수로 구분 운영한 후 전반적인 정책실명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공공기관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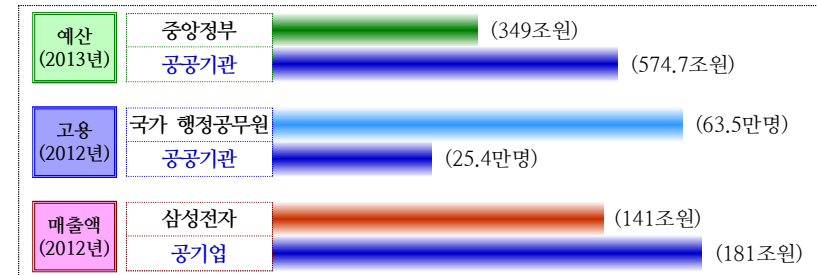
-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 도입하고 노사 단체협약서 전면 조사 실시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주체인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총 295개소가 공공기관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 30개(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고, 준정부기관이 87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이며, 나머지 17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짐
- 공공기관의 매출은 국내 전체 총산출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산규모도 국가 전체 자산의 10% 수준을 점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료: 기획재정부(2013)

○ (공기업의 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지금까지 공기업은 에너지, 철도, 항만, 상수도, 주택 등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해 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또한 편으로는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낭비,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재평가 하고, 앞으로 계속 공기업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뉴질랜드는 모든 공기업의 기본 목적을 성공적인 기업(successful business)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 뉴질랜드의 국영기업법에서는 '성공적인 기업'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  
 ▲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 공동체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책임성을 완수해야 한다

- 공기업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 뿐만아니라 공기업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찾고 있으나, 비효율성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는 부채증가만 하더라도 경영의 비효율성이나 경영실패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수자원공사 부채, LH공사 부채, 한국전력 부채 등

\*공공기관 개혁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아갈 기관, 민영화 추진 대상 기관,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한 후 각각적인 맞춤형 개혁정책을 설계 운용해야 함.

○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체계)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제도는 당초 공운법 제정 방안 마련 당시부터 논란의 요소를 안고 있음.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으로 채택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원가보상률 대신 자체수입 비율(자체수입/총수입)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성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 초래

- 그 결과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개념 및 지정 목적의 모호성,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협소성, 공공성과 시장성 기준 활용의 불명확성,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변동의 문제점, 공공기관의 유형화에 따른 지배구조 설계 기준의 모호성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됨

- 현행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2008년 SNA에 부합되지 않음

○ (관리되지 않는 노사단체협약서) 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버젓이 ‘우선 특별채용’ (공상자 등 가족)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45곳(전체의 15.8%)에 이르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서 상 ‘우선 특별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45개 기관에 이르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은 단체협약서를 넘어 인사규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노사단체협약서 상 가족 ‘우선 특별채용’을 명시한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가족 ‘우선 특별채용’이 있는 기관		장학금 지급조항 추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공공기관	295	45(부설기관1)	11	14
지방공공기관	137	19	0	0
소계	432	64(부설기관1)	11	14
계	432	76		14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안전행정부, 김상민의원실

“한국남부발전 인사관리규정”

제 2 장 채 용

제 7 조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신체불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를 대치 채용할 때

##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현행 공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분류체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2008 SNA와 같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 해야 할 것임.

이것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분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은?

\* 글로벌 표준 도입(2008 SNA, 발생주의\_제도단위\_원가보상률 50% 미만→일반 정부로 분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간 경제 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필요함

질의 2)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기준에는 글로벌표준 도입과 함께 다양한 질적 판단요소들을 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지정 및 유형 분류 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 제언) 원가보상률 50% 규칙이 시장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이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여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SNA상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생산원가(production costs) 대비 판매수입(receipts from sales) 비율 50%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판매수입(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 운영 관리 실태 부적절)

질의 3) 본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서 상 ‘당해 공공기관 직원의 직계 가족 등을 특별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현황을 살펴보고,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자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음.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의원실로 보내온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 233p 공공정책국의 주요기능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합리화 정책과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4)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서 상의 ‘우선 특별채용’ 문제는 지난 7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밝혀졌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 하였으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

과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왔는지  
공공기관 지정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임

질의 5) 공공기관 295개 기관 중 단체협약 상에 ‘우선 특별채용’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이 45개 기관이며, 더 나아가 인사규정에 동 내용을 명시해 둔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나 됨.  
특히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대부분 인사규정에서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질의 6)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등의 노사 단체협약서에서는 위 기관의 모든 규정과 규칙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아직 바꾸기 위한 시도조차 않고 있는 것임.

과연 이런 기관에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인데, 부총리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공공기관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내용임)

서울대학교 병원 ‘노사 단체협약서’ <기타 공공기관>

제4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에서 정한 모든 제 규정 규칙 및 직원간의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

제75조(우선채용)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58조 2항에 따라 학자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해자가 타 기관에 취업하여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을 제외한다.

강원대학교병원 노사단체협약서 <기타 공공기관>

제2조 【협약의 우선적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병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질의 7) 위 내용 또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최소한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검증)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8) (자료요구) 노사 단체협약서 상의 ‘우선 특별채용’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공기업의 인사규정에 ‘우선 특별채용’을 명시한 것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알리오 상의 내용을 일람해 본 결과로 꼼꼼히 본다  
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문제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 하며, 차체에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단체협약서’와  
‘인사규정’ 상의 고용승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신 후,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 전달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비롯  
한 재무건전성, 그리고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에서 정부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지 의문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임원 임명, 보수지침 수립, 평가 등  
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고, 당연직 위  
원장으로 부총리께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을 주도하고 있음

질의 9) 부총리께서는 몇 차례나 동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는가?

(2013년 9차례 회의 중 제7차 회의에 1회 참석)

⇒ 공공기관 관련 제반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참석해 주시길 당부 드림

## 참고1 단체협약서의 우선효력 규정

### 〈강원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적 효력】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병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  
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 〈경북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우선효력】본 협약은 병원에서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단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사항은 법정기준에 따른다.

### 〈경상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효력) 본 협약은 병원에서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  
선한다. 단,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사항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

### 〈서울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에서 정한 모든 제 규정 규칙 및 직원간의 개별  
계약보다 우선한다.

제75조(우선채용) 병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취업이 불가  
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1인을 우선 채용하  
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58조 2항에 따라 학자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해  
자가 타 기관에 취업하여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을 제외한다.

### 〈전남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병원에서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 〈충남대학교병원 2012년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효력】이 협약에 정한 근로기준은 근로기준법, 병원에서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  
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  
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26조【우선채용】병원은 감원자의 요구가 있을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정년퇴직과 업무상 상  
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자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충북대학교 2012년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 효력】이 협약에 정한 근로기준은 근로기준법, 병원에서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조  
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26조【우선 채용】



## 참고2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중앙공공기관 현황 및 채용현황

출처: 김상민의원실 및 각 기관 제출자료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특별채용 근거	특별채용 조건	비고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삭제했으나 2010년 전입사자까지 해당)	공상	[특별채용] 2009:5명 2011:7명 2012:1명
기타 공공 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최근 삭제)	공상	[특별채용] 2008: 1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일반사망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대덕연구개발특구북지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특별채용 근거	특별채용 조건	비고
	인천종합에너지(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인사규정	공상	[인센티브채용] 2010:1명 (계약직)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정년퇴직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단체협약	공상 정년퇴직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천문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특별채용 근거	특별채용 조건	비고
					자녀장학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준정 부기 관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공상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폐지추진)	공상	[특별채용] 2006~2013: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폐지추진)	공상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단체협약	공상	[특별채용] 2008~2013: 2명

● 일반사망은 공상도 포함.

### 참고3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지방공공기관 리스트(출처: 안전행정부)

출처: 안전행정부

소 관	기관명	구분	세부 채용 조항(지방공사는 모두 단체협약문)
서울 특별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서울시설 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공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채용
부산 광역시	부산교통 공사	공사	업무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중 직원 임용 자격을 구비한자 1인 정규직 특별임용.
	부산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우선채용
대구 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구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구환경시설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인천 광역시	인천교통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자를 해당 직종을 감안하여 우선채용
대전 광역시	대전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대전도시철도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 특별채용
	대전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소 관	기관명	구분	세부 채용 조항(지방공사는 모두 단체협약문)
경기도	화성도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 현재 단협협상 진행중., 삭제검토에 있음
	수원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선채용하도록 노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단	<u>(우선채용 조항)</u> <u>제35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공단은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재고용을 원하는 때에 공단의</u> <u>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특채 가능</u>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	기타공사	조합원이 재직중 순직, 업무상재해로 퇴직시 피부양가족 중 공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직원으로 우선채용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환경미화원 외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퇴직한날로부터 1년 이내)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참고 4	우선 특별채용이 있는 중앙공공기관 현황 및 채용현황
------	------------------------------

출처: 김상민 의원실 조사 및 각 기관 제출자

형태	기관명	주무부처	고용세습근거	세습조건	비고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담배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협약	공상	
기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단체협약 (삭제했으나 2010년 전임사자까지 해당)	공상	[특별채용] 2009:5명 2011:7명 2012:1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대덕연구개발특구북지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인천종합에너지(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인사규정	공상	[인센티브채용] 2010:1명 (계약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조정실	단체협약	공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일반사망	[추가특혜] 자녀장학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단체협약	공상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규정	공상	



## 새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 현황과 문제점

- 10월 25일이면 새 정부 출범 8개월에 접어들게 됨. 정권 초기 1년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과도 같으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저성장과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심화,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 부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제대로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임.

- 2/4분기 중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
- 경제민주화 ⇨ 경제활성화, 생애맞춤형 복지 ⇨ 재정맞춤형 복지로 전환

- (경제 컨트롤 타워)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며, 강력한 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부총리나 경제팀 전체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 지속

-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안행부와 국토부의 갈등 수수방관
- 경제민주화의 부작용,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대선공약 이행 재원 마련, 기초연금 도입 등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 결여

- (장기 비전 부재)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단기적 경기대응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기존의 업무계획에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한 수동적인 내용으로 업무계획서 구성(국가미래연구원, 8.26)

\*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지만, 대한민국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백년대계, 창조경제의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 정권)

\*\*국정감사 업무자료, '경제활력 제고와 활력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이 빠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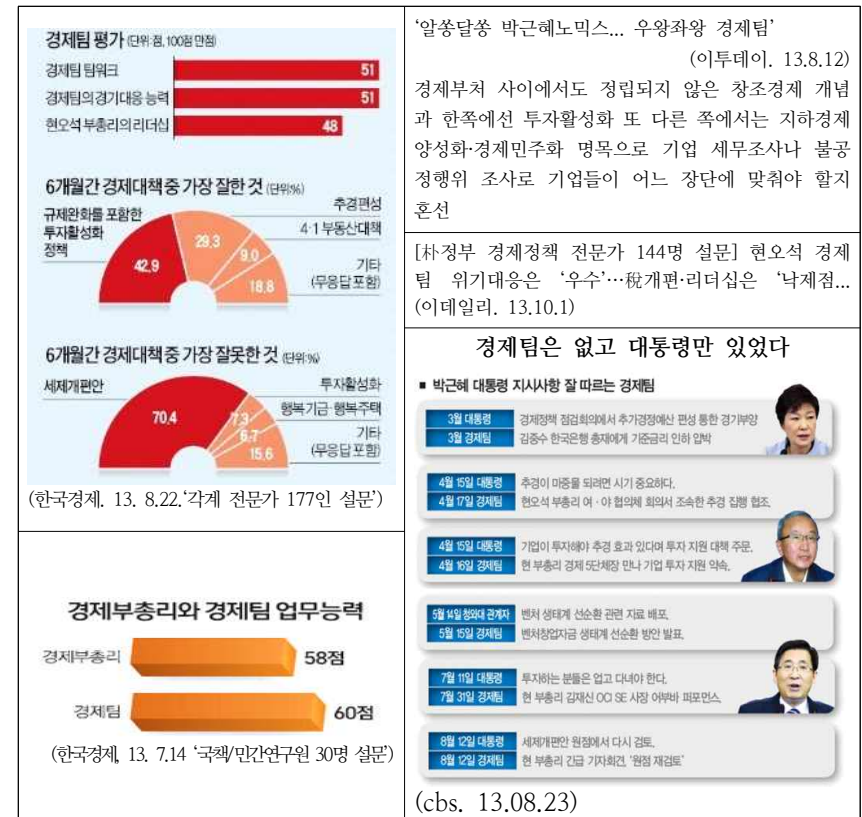
- (세제개편 소동)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성급히 추진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 부족에서 나왔다는 비판에 직면했음.

- 정부는 8월 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히다가 하면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기존 세제를 손질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배가시켰다고 평가

\*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봉 3450만원 봉급생활자가 실제 중산층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가짐

- 국민적 반대, 여야 정치권의 반발 ⇨ 박근혜 대통령,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

- (언론에 비친 경제팀) 지난 8개월간 새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위기대응 능력과 리더십에서 경제전문가 등으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았음. 특히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 질의 및 제언

- 기획재정부장관이 유일한 부총리로서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이의 집행을 책임지며 부처 간 또는 정부 기관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기타 조정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음.

질의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부총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오셨음.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제1기 경제팀의 수장인 부총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수행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스스로를 평가해 주시기 바람.

\* CBS 8.23 '경제팀 없고 대통령만 있다', 이코노믹스리뷰 7.10 '경제팀 기대이하'

질의 2) 출범 첫해인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는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특히 현 경제팀은 '천수답' 경제비전을 극복하고 보다 명확한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부채의존과 수출의존 버티기 구조에 대한 개혁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저성장, 저고용,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단기적 대책과는 별도로 장기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저성장\_저물가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전환 필요

질의 4)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평가한 국정과제 신호등을 운영해 오고 있음.



9월 현재 140개 과제 중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 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점등됐음

그러나 야당 등 일부에서 기초연금 공약과 교육비 경감, 서민 금융부담 완화, 주거 안정 같은 과제들이 녹색등으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세제 개편안) 7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박근혜 정부 제1기 경제팀의 세제개편안은 논란이 많았음. '증세냐 아니냐'부터 '월급쟁이 잡는 세제안'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질의 5)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불쑥 들고 나온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 빈곤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많음.

이로 인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증세다', '중산층의 개념(3500만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제언) 정부 출범 1년 후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지금, 경제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함.

과거 녹실 회의를 주재한 부총리 중에는 장기영 김학렬 남덕우 부총리처럼 온 몸을 던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 많음.

최근 부총리께서 다시금 시작하신 녹실회의(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가 달라진 시대 여건으로 인해 옛날 같은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는 어렵더라도 녹실 회의의 부활이 현오석 경제팀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장기영 전 부총리는 1964년 5월 취임 직후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렀음.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제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의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는 오후 9시에 시작해 밤늦게 끝났는데, 한국의 경제발전사(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녹실(綠室) 회의'의 출발이었음. 이 방의 가족의자와 양탄자가 모두 녹색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음.

## 성장과 조화를 이룬 경제민주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 □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정부의 제1국정 기조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임. 그러나 지난 8월28일 10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심화됨

- 경제활성화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나, 경제민주화는 세대간 갈등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관련된 장기 전략적 차원의 문제  
(단기적 문제 때문에 장기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됨)

○ (경제민주화 후퇴주장) 야권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이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됐고 금융보험사의 연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개편,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을 강조하고 있음.

- 대통령계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음  
다만, 특정 계층을 막거나 투자를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음

〈참고〉 상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처리 현황 : 6개 과제 (4개 법률 개정)

- \* (4월 국회) ①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적용, ②중기조합에 대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이상 하도급법)
- \* (6월 국회) ①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②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 등), ③가맹점주 권리강화(가맹사업법), ④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 (진척상황을 보는 관점) 경제민주화 과제의 진척상황은 몇 개 과제를 완료했는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의 내용과 효과 등 질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반기에 입법화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

○ (경제 5단체장의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지난 9월 2일 “기업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 입법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통상임금을 비롯한 14개 항목에 대한 규제 입법 자체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였음

\* 경제5단체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14개 항목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유해물질 과징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상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임

- '통상임금'으로 38조원대 소송불안,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 노사갈등 불씨  
- 美·EU보다 높은 환경규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수조원대 직격탄 '유해물질 과징금'(유기화학물질관리법) 합리적 개선요청  
- 박용만 상의 회장 “美·日·EU 기업환경 개선 노력 ... 기업관련 입법에 완급조절 필요”  
- 10대그룹 창조경제에 37조원 투자(전경련 조사) 주장

### □ 질의 및 정책제언

○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재정적자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함.

질의 1) 최근 경기활성화 정책의 강조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후퇴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경제활성화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나, 경제민주화는 세대간 갈등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관련된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3)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율이 16.5%에 불과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하반기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개혁연구소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13.8.22)

⇒ 공약이행율이 16.5%에 불과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

구분	세부과제	배점	단순 평가	실효 성 평가
대기업집단 규제 (20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10), 신규순환출자 금지(5), 공시제도 개편(5)	20	7	5
공정거래질서 확립 (20점)	전속고발제 폐지(5), 3배손제도(5), 사인 금지청구제(5), 금융소비자보호법(5)	20	7.5	4.5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선(20점)	금산분리 강화(10),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5),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5)	20	2	1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20점)	양형강화(10), 사면권제한(2), 대표소송제도(5), 증권집단소송제도 개선(3)	20	-	-
이사의 독립성 강화 (10점)	감사위원 분리선출(5),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5)	10	-	-
기타(10점)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5), 연가금 의결권행사 강화(5)	10	-	-
합계	-	100	16.5	10.5

- (제언) 경제민주화 정책의 과제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철폐를 가하되,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 스스로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주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림.